

I. 통상현안정보

■ 日, 중국에서 연간 1조엔에 달하는 지적재산권침해 피해 입어

- 일본 업체들의 지적권 피해사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 일본 업체들이 중국에서 2003년도에 1조엔 이상에 달하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음. WTO 가입 이후 중국 정부가 관련 지적재산권법 정비 노력을 하고, 對업체 계몽활동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개선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국 정부의 위조상품 단속과 지적재산권 계몽활동이 최근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피해 침해 방법이 갈수록 지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일본 업체는 중국 정부의 대외적인 단속강화 천명에도 불구하고 중국내 지적재산권 침해가 성행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중국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을 문제삼고 있음. 중국 당국이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지적재산권 침해를 적발하고 있으나 형사 재판부에 회부돼 실제로 처벌되는 비율은 전체 적발건수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일본 업체들이 형사 고발을 통해 중국의 위조품 제조자 등을 제재하려고 할 경우 통상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다, 수년이 소요되고 유죄로 판결되는 비율도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일본 피해업체들이 비교적 처리기간이 짧은 벌금 부과와 행정 처벌로 처리할 경우에도 위조상품 제조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평균 벌금액이 각각 6,300~9,200위엔, 1,800~3,900위엔 수준으로 제재 효과가 의문스러운 수준이라는 지적임.
- 이와 같이 유명무실한 지적재산권 침해업체에 대한 제재로 인해 과거에 적발된 적이 있는 침해업체가 다시 해외업체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재범률이 무려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중국내 상습적인 지적재산권 침해업체들은 1회 침해행위 적발 이후 다시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받는 법규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시로 법인의 명이나 법인격 형태를 바꾸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12일 외무성내 지적재산권침해 대책반을 설치하여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일본 산업계도 지난 5월 중순 민관합동 지적재산보호 대표단(단장: Honda 회장)을 중국에 파견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의 재발 방지책 강화 등을 요청하였음. 이에 대해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올해 안에 지적권 침해범에 대한 형사소추 기준의 개정을 약속했으나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지적권 침해 방지에 효과를 거두지는 미지수임.

□ 의장권(디자인) 관련 지재권 침해 사례 급증세

- 최근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재권 침해 사례중 특히 의장권(디자인)관련 지재권에 대한 침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중국에서 아직도 의장권 등록과 관련하여 선등록주의에 의해 무심사 등록을 허용하고 있어, 중국내 모방업체들이 해외 업체의 디자인을 버젓이 자사의 의장권으로 신청하여 등록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편, 2003년도에 중국에서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 현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상표권 침해 : 2003년도중 중국에서 적발된 위법 상표는 총 37,489건이며 이중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는 26,488건, 벌금 총액은 약 31억엔에 달하였음.
 - 저작권 침해 : 중국의 판권행정당국이 수리한 판권(Copyright) 침해 건수가 전년대비 2.6배 급증한 23,013건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의 관련 당국이 압수한 불법 복제 CD, DVD 등이 1억2천만개 이상에 달하였음.
 - 세관 적발 : 세관에서 적발된 지재권 침해는 756건으로 침해 총액이 6,797만위엔에 달하였으며 이중 수출을 위한 위조상품의 압수 사례가 74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였음.
 - 의장권 침해 : 일본 등 해외업체의 디자인을 모방한 의장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무심사 등록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의 제도적인 결함으로 인해 모방업체들이 해외업체의 의장(디자인)을 자의적으로 등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 형사 입건 : 중국 사법부가 2001년 4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수리한 지재권 침해관련 형사 사건은 총 851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75건에 대해 최종 판결이 내려졌음. 同판결에 의해, 143명이 5년 이상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으며 582명이 5년 이하의 징역형 판결을 받았음.

(문의처 : 오오사까무역관 이배우 osaktc@kotra.or.jp)